

일반 논문

트랜스내셔널 이주 시대,  
환대와 공생을 위한 공동체적 실천  
: 세일라 벤하비브의 세계시민주의 재검토\*

손민석 (조선대)

국문요약

지난세기 후반 영토성의 위기와 함께 탈근대 질서가 주목받았다면, 오늘날은 지정학 (geopolitics)이 다시 부각되면서 포스트-탈근대 패러다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리더십 부재 및 초국적 협력 마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부상하고, 이방인 혐오와 차별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환대와 공생을 위한 실천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향한 세계시민주의 규범과 민주적 자결 원칙을 조화시킨 벤하비브 작업을 재검토한다. 먼저 벤하비브의 세계시민주의 기획을 논의하고, 그녀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배반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민주적 자결 원칙이 보편인권규범을 증진하기보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종교정치 포퓰리즘 맥락에서 이해한다. 끝으로 인간의 보편도덕 규범과 계몽 합리성(로고스) 일반도 접근을 넘어 '상생하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내러티브와 집단신화(미토스)의 역할에 주목한다. 실천적으로는 주류문화를 점유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425>

\* 본 논문은 한국정치사상학회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동서양 사회통합의 정치사상>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초고에 귀한 논평을 해주신 김범수, 조계원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한 이들과 낯선 타자들이 '상생'하는데 있어 문화적·종교적 결사체의 역할 재고와 담론 재구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제어: 세계시민주의, 세일라 벤하비브, 종교정치 포퓰리즘, 공동체적 실천, 사회적 상상

## I. 들어가면서

탈냉전 이후 영토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주권개념만으로 포괄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면서 일각에서는 세계시민주의 규범이론이 발전되었다. 일례로 세일라 벤하비브는 『타자들의 권리』에서 자유시장 국제질서, 탈영토화된 세계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 국제인권 레짐의 발전, 탈근대 네트워크사회 도래에 주목하면서 표준화된 '베스트 팔렌' 근대 주권규범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가 시민권 제도가 분해되거나 다양한 요소들로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국가주권은 "이미 낡은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sup>

팬데믹 사태를 전후로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고 있다. 감염병 전파 예방 목적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고,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권력관계가 구성되고 있다. 아날로그 정치공간에서 부각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협력 쇠퇴와 배타적 내셔널리즘 부상이다. 트럼피즘, 브렉시트 사태로 표출된 내셔널리즘의 재부상, 종교내셔널리즘과 극우주의의 결합, 백신주권을 둘러싼 국가관할권 강화와 '백신 불평등'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패권 국가들의

---

<sup>1)</sup> Benhabib, Seyla,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

주권질서의 건재함과 자유세계질서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세기 후반 영토성의 위기와 함께 탈근대 질서가 주목받았다면, 오늘날은 지정학(geopolitics)이 다시 부각되면서 포스트-탈근대 패러다임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리더십 부재 및 초국적 협력 마비 역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미어샤이며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거대한 망상’에서 각성되어 다시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른다.<sup>2)</sup>

냉혹한 국제현실을 바라보면서 ‘망상에 빠지지 않은 채’ 공생과 환대를 위한 규범을 여전히 말할 수 있을까?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부상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위한 실천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sup>3)</sup> 이 글은 먼저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향한 세계시민주의 규범과 민주적 자결 원칙을 조화시킨 벤하비브의 작업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그녀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배반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민주적 자결 원칙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보편인권규범을 증진하기보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와 종교정치 포퓰리즘 맥락에서 이해한다. 끝으로 인간의 보편도덕 규범과 계몽 합리성(로고스) 일변도 접근을 넘어 ‘상생하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내러티브와 집단

<sup>2)</sup> Mearsheimer, John,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8). 난국에 처한 자유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관점은 다음을 참조하라. Ikenberry, John, *A World Safe for Democracy: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the Crises of Global Ord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20).

<sup>3)</sup> 팬데믹 시기 국경폐쇄와 같은 이주통제, 취약한 노동시장,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등 악화된 이주의 조건을 추적한 작업은 다음을 참조하라. 히오콘다 에레라, 「팬데믹 시기의 이주: 불평등의 새롭고 오래된 형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2 라틴아메리카: COVID-19 팬데믹과 불평등』 (서울: 동명사, 2022), 63~74쪽.

신화(뮈토스)의 역할에 주목한다. 다원화된 세계에서 동질사회라는 환상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ies) 구축을 위한 종교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치제도적 조건에 관심을 가진다. 실천적으로는 주류문화를 점유한 이들과 낯선 타자들이 ‘상생’하는데 있어 문화적·종교적 결사체의 역할 재고와 담론 재구성에 관심을 가진다.

## II. 세일라 벤하비브의 세계시민주의 -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과 ‘민주적 반추’를 통한 타자의 권리 규범 모색

2차 대전 이후 국제인권레짐 형성, 탈냉전과 탈영토화 현상 등 ‘트랜스내셔널 전환’으로 호명되는 일련의 국제정세 변화 가운데 ‘정의에 관한 세계시민주의 규범’(Cosmopolitan Norms of Justice)의 도전이 가시화되었다. 비단 특정한 영토의 국민국가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초국적 차원에서의 권리와 올바름의 원칙이 국가 관할권에 도전한 것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이주할 권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내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13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14조).” 국가관할권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내셔널 이주와 관련된 국제인권레짐은 “구체적으로 귀속된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권리라기보다, 보편적 인간 자체(human being simpliciter) 이기에 여기에서 비롯된 개인들의 권리”를 천명하면서 발전하게 된다.<sup>4)</sup>

<sup>4)</sup>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10. 타국으로의 이주(emigration)와 타국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벤하비브는 국가주권에 입각한 단일한 시민권 규범을 뛰어넘어 ‘다가오는 세계시민주의’ 규범을 옹호한다.

벤하비브가 국가 경계나 관할권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국경을 허물기 보다는 투과성이 있는(porous)”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sup>5)</sup> 민주적 자결원칙에 입각한 국가관할권을 존중하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평등의식과 타자의 권리에 대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하비브는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적 성원권 규범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중적 정체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성원권 문제는 근본적인 충돌 내지는 적어도 잠재적인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민주적 다수의 의지가 공공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에서 다수가 난민을 배척하거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민주적 자결원칙과 세계시민주의 정의 규범을 화해시킬 수 있는가? 벤하비브는 국내 수준의 민주공동체에서 준수되는 규범과 초국적 수준의 보편적 도덕규범 사이의 잠재적 긴장을 의식하면서, 양자를 매개하고자 한다.<sup>6)</sup>

‘보편적’ 담론윤리학(discourse ethics) 관점에서, 벤하비브는 이 문제에 접근한다. 담론윤리학 관점은 모든 사람이 도덕적 대화에 평등하게 참여하면서 상호존중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가정한다. 대화상대자 범위는 국경 내부로 제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확장된다. 동시에 대화상대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것을 포기한 채 ‘상대주의

---

부터의 이주(immigration)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국제인권레짐이 국경을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 이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승인하면서도 이주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을 벤하비브는 지적한다.

5)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221.

6) Benhabib, Seyla, *Another Cosmopolita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7.

적 회의론'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벤하비브의 기획은 공동체주의와 정치현실주의 혹은 회의주의와 구분된다. 그녀가 보기에 공동체주의자들이 지닌 문제는 “보편적 도덕원칙을 특수한 윤리적·문화적 공동체에 유효한 사항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데 있었다. 또한 정치현실주의자들이나 일부 급진적인 회의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도덕을 매개하기보다 분리하는데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벤하비브는 특정 공동체 내부 윤리, 실정법, 정책을 보편도덕과 구분할 뿐 아니라, 보편성에 입각한 비판의 공간을 개별 영역에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한 개인이 어떤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간 존재로서 갖게 되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규범을 통해 이 작업은 유효성을 획득한다. 동시에 벤하비브는 “귀속된 공동체에서의 성원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의식한다.<sup>7)</sup>

그렇다면 민주적 다수의 의지(will)와 세계시민주의 정의 규범이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민주적 시스템에 속한 다수가 환대와 공생과 같은 세계시민주의 규범에 대한 ‘의욕’(desire)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 자체가 세계시민주의 정의 규범과 내재적으로 연계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벤하비브는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과 ‘민주적 반추’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다.

벤하비브는 칸트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이상적 차원에서 민주적 지배 체제에서 주권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인권의 담지자로서 존중 받는다”는 원칙을 수호한다.<sup>8)</sup> 이 원칙에 따르면 고대와 달리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권 담론, 성원권에 대한 도덕적 요청은 근원적으로 보편인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권이라는 보편원칙에 부합될 때라야 헌법의 실행

7) Benhabib, *Another Cosmopolitanism*, pp. 17-20.

8)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43.

행위가 민주적 주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기에 출간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잘 드러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근대정치에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은 보편인권에 부합하는 원칙에 자신을 귀속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입법 행위를 통해 ‘우리’라는 범주를 설정한다. “주권의 담지자들은 법을 만드는 저자인 동시에 법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서 자기지배 체제를 수립한다.” 민주적 주권자의 의지가 실효성을 나타내는 영역은 ‘우리’ 범주로 경계 지워진 관할권 내부이다. 근대적 공화국에서 시행되는 “민주주의는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벤하비브는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paradox of democratic legitimacy)을 고찰한다. 그것은 근대 민주공화국이 태생적으로 상호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보편인권과 인민주권이라는 두 요소 모두를 불가결한 요소로 내세우는 데에서 비롯된다. 보편인권이 특정 영토와 맥락을 초월해서 호소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인민주권은 특수한 경계 내부에서 자기지배 원칙을 주장한다.<sup>9)</sup>

벤하비브는 보편인권과 인민주권 사이의 긴장이 완벽한 형태로 해소되기는 어렵더라도,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근대 입헌민주주의 역사는 양자가 교섭하고, 상호 재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숙고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끝나지 않은 여정’(unfinished journey)이다. 그녀가 보기에 보편인권 규범과 인민주권 다수의지는 서로가 서로를 비껴가며 매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심화시켜 왔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호명된 권리주체가 실제 당대 현실에서 대체로 백인·남성·부르주아로 국한되고, 시민권 역시 ‘등급화’(graduation)되어 있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이후 노예제 폐지, 보통선거 시행, 시민권 운동 등 ‘포함과 배제’의 민주주의 역사는 주권적 시민의 등급과

<sup>9)</sup>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p. 43-48.

범주가 유동하면서 확대된 양상을 나타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특수한 맥락을 초월하는 보편인권 규범과 민주적 자결 원칙을 매개하는 작업이 민주적 반추(democratic iteration)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벤하비브는 전망한다. 민주적 반추는 보편권리에 대한 요청이 법·정치적 제도의 차원과 시민사회에서의 결사체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쟁과 경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맥락에 기입되고, 엇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공적심의회와 의견교환을 포괄하는 복잡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동일성으로 환원되는 단순 복제로서의 반복이 아닌, 공적으로 토론하고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주어진 맥락을 비틀거나 새로운 다른 맥락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의미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출해 가고 상호 대화를 풍요롭게 하는 되풀이 과정이다.<sup>10)</sup>

벤하비브는 법 해석 영역에서 민주적 반추 혹은 되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법을 생성하는 정치’(jurisgenerative politics)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법을 생성하는 정치’는 자연권 이론이나 법실증주의와 구분된다. 자연권 이론이 일반 대중의 의지가 담긴 변혁행위(transformative acts of will)에 휘말리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적 기본원칙의 토대를 규범화한다면, 법실증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권적 인민이 이전에 정립했던 실정법 체계와 곧바로 동일시한다. 양자와 달리 ‘법을 생성하는 정치’는 법과 권리의 변주 속에서 초월적 규범과 대중의 의지가 서로 침투하는 공간을 열어둔다. 한편에서 민주정치를 틀 짓는 보편권리에 대한 요청은 대중들의 특정한 입법행위 맥락을 초월한다고 변호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신성불가침 원칙으로 남기보다, 다양한 공적 논쟁과 경합, 수용과 변용, 철회에 이르는 계속되는 되풀이 과정(re-iteration)을 통해 민주적 자결 원칙과 결합한다는 것이다.<sup>11)</sup>

<sup>10)</sup>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p. 179-180.



보편인권과 인민주권이 상호 침투하는 ‘다공성’(porosity)의 공간은 민주적 자결 원칙과 세계시민주의 규범의 조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벤하비브는 탈영토화된 세계에서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과 같은 성원권 결정 문제는 과거 베스트팔렌 정치문법처럼 영토, 국경 범주가 아닌 민주적 반추와 도덕적 담화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신과 내가 서로를 수용하고 도덕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서는 한 국가의 성원권이 있고, 당신은 아직 그 성원권이 없지만 얻고자 한다면, 이때 내가 당신의 성원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왜 당신이 우리 사회에 합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지에 관해 우리 각자가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up>12)</sup> 이와 같은 ‘대화적 보편주의’(dialogical universalism) 기획은 기존 사회의 “지배문화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난민들과의 맞물림으로 확장되어 탈근대국가적인 세계시민연대로 발전하게 된다.<sup>13)</sup> “세계시민사회 내에서 민주적 반추 투쟁의 상호 맞물림 그리고 타자를 잠재적 공동시민(potential cocitizen)으로 인정하는 환대의 보편적 권리가 포함된 국경 너머의 연대” 움직임이 창설될 때 “또 다른 세계시민주의, 다가올 세계시민주의”는 당도한다.<sup>14)</sup>

하버마스가 『이질성의 포용』에서 ‘유럽의 국민국가’를 다루는 맥락 속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이 법 아래에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사회적 경계를 만드는 작업”은 필연적이라기보다 “전적으로 우연성에 기초해 있다.”<sup>15)</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존하는 국경을 중심

11)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181.

12)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138.

13)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212.

14) Benhabib, *Another Cosmopolitanism*, p. 177.

15) Habermas, Juergen.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8), pp. 115-116.

으로 한 정치적 관행 및 실천과 이를 역사화하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도덕규범 및 보편적 연대 사이에는 ‘개념적 간극’이 존재한다. 벤하비브는 민주적 반추를 통해 “헌정국가에서 법의 수립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간극을 해소”하는 한 가지 모델을 선보인 것이다.<sup>16)</sup>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근대 입헌국가에서 ‘보편적 세계시민 차원에서의 도덕적 평등에 대한 신념’과 ‘특수한 정치공동체 맥락에서의 시민적 평등에 대한 신념’의 양립 및 매개를 모색한 벤하비브의 작업을 두 차원에서 묻게 된다. 첫째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담론의 시효성 문제이고, 둘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녀의 기대와 결부된다. 먼저, 벤하비브의 기획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진단에서 출발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민주적 반추를 통한 새로운 정치행위 및 정치주체 형식이 구상된 배경에는 기왕의 베스트팔렌 질서로는 포착되지 않는 영토성의 위기 및 유럽연합에 나타난 시민권의 분해(disaggregation)라는 시대상황이 있었다. 벤하비브는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도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단일한 시민권 모델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경계선(anachronistic delimitation)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여행하는 지역, 곧 국가들의 세계 사회는 변하였지만, 우리의 규범지도(normative map)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7)</sup> 그녀는 베스트팔렌 “시민권 모델이 종언을 고하는 정치적 진화의 순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담론윤리학으로 규범지도를 새롭게 그려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 세계정세에서는 내셔널리즘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베스트팔렌 혹은 탈근대 질서의 시간을 지나 포스트-탈근대 시공간의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up>16)</sup>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p. 17-18.

<sup>17)</sup>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p. 5-6.

지금까지 살펴본 보편적 담론윤리학으로 그리는 규범지도는 여전히 유효한지 되묻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벤하비브의 전망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녀에게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인민을 주권자로 구성하는 동시에,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인 인권원칙으로부터 구한다는 점에서 자기 제한적인 집결체(self-limiting collectivities)”이다. 주권자 인민의 정당성이 이방인과 타자의 권리와 같은 근본적 인권원칙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타자의 권리는 ‘데모스의 정체성’ 경계를 설정한다. 이방인은 ‘우리, 인민’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데모스의 정체성’을 둘러싼 “규정과 재협상, 묶어냄과 흐트러뜨림, 윤곽 짓기와 유동하도록 만들”에 있어서 문지방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외국인, 타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여부는 도덕적 양심 차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반사성(반성역량, reflexivity)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된다.” 이 맥락에서 성원권 문제는 ‘법을 생성하는 정치’의 장소에서 핵심자리를 점유한다.<sup>18)</sup>

오늘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타자의 권리와 보편적 환대라는 세계시민주의 규범이 데모스의 입헌적 자기창조와 정체성의 재구축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가? 보편인권의 규범이 기왕의 권력관계망을 교란하면서 ‘자기를 제한하는’ (동시에 타자의 권리 지평을 확장하는) 집결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산시키고 있는가? 도리어 닫힌 내셔널리즘 문법에 고착화된 데모스가 민주적 자결원칙을 명분삼아 타자와 이방인을 추방하고 있지 않은가? 벤하비브 역시 이방인을 왜곡된 상상으로 ‘타자화’하고, 배제와 폭력이 촉발된 현실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녀는 “망상 없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without

<sup>18)</sup>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178.

illusions) 전망에 여전히 희망을 품는다.<sup>19)</sup>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민주주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외부 도전만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침식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출현, 그리고 배타적 내셔널리즘과 결합된 종교정치 포퓰리즘의 등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Ⅲ. 새로운 내셔널리즘 부상과 포퓰리즘 정치 -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종교정치 포퓰리즘

공산권 붕괴 및 냉전의 종식 직후 후쿠야마는 역사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라는 목표가 최고점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념갈등이 종식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찬가는 자유민주주의 ‘쇠퇴론’으로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다.<sup>20)</sup> 지난세기 후반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난 민주화의 조류들 및 ‘민주주의 공고화론’이 무색하리만큼 ‘민주주의의 탈공고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데모스의 주권적 의지를 내세우지만, 권리 보장을 위한 자유주의 규범을 위반하고 보편적 세계시민주의 규범과 충돌하기도 한다. 벤하비브의 기대와 달리, 보편적 차원에서 도덕적 평등

<sup>19)</sup> Benhabib, Seyla, *Dignity in Adversity: Human Rights in Troubled Times*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1).

<sup>20)</sup> Mounk, Yascha,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Levitsky, Steven, Ziblatt, Daniel,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2018); Haggard, Stephen and Robert Kaufman, *Backsliding: Democratic Regress in the Contemporary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적 자결원칙에 근거해 다수의 주권적 의지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사이에 균열이 심화된 것이다.<sup>21)</sup> 민주주의 용성이 개인 및 소수자 그룹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권리 및 자유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와 함께 제기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sup>22)</sup>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방인과 타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배격하는 흐름을 보인다. 일례로 2009년 스위스에서 이슬람 사원 옆에 세우는 미나레트(첨탑)을 건립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나레트 논쟁’이 국제사회로 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전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혐오)와 ‘유라비아’(유럽의 아랍화) 공포가 확산되면서 ‘민주적 다수의 의지’를 앞세워 첨탑 건축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독일에 서 외친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 구호는 한 세대를 지나면서 극적으로 그 의미가 변모했다. ‘Wir Sind das Volk’는 1980년대 말 동독에서 독재와 관료화된 정치엘리트에 맞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투쟁하던 다수 시민들이 외친 구호였다. 2015년 동일한 구호가 다시 독일에서 울려 퍼졌다. 이번에 일반 대중들이 배격하고자 했던 투쟁의 대상은 달

21) 벤하비브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긴장을 인식하고 있다. “민주적 주권자가 권리에 관한 일정한 형식적, 실제적 해석을 담은, 그 자신이 사전에 천명한 서약(pre-commitment)에 따라 주권자의 의지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이 발생한다. “강한 자유주의자들이 주권적 의지를 인권 목록에 포함된 사전서약을 통해 구속하고자 한다면, 강한 민주주의자들은 권리에 대한 그와 같은 선정치적 이해(pre-political understanding)에 반대하면서, 물론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겠지만, 그러한 사전서약조차도 주권적 인민이 재협상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 45.

22) Zakaria, Fareed,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 2003).

랐다. 시리아 내전 사태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들이 독일로 유입하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이민자를 배척하면서 ‘우리들만이 국민이다!’고 외쳤던 것이다.<sup>23)</sup>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포퓰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인 포퓰리즘은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 차원, 정치수사 및 동원전략 차원, 역사적 변화 국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24)</sup> 여기에서는 지역적·역사적 맥락을 검토하면서 개별 사례의 독특성을 부각하기보다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방인과 타자를 배격하는 오늘 의 현실과 포퓰리즘의 ‘종교적’ 국면을 조망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엘리트와 국민 사이의 적대를 부각하고, 기성 제도권 엘리트를 격하시킨다. 포퓰리스트들의 수사에 등장하는 엘리트는 ‘침묵하는 다수’를 소외시키면서, 글로벌 세력에 ‘순수한 국민’의 유산과 영혼을 팔아넘긴 ‘부패한 존재’들이다. 기성 엘리트는 내부에 존재하는 ‘적폐 세력’에 불과한, 정치대표 자격이 없는 이들로 간주된다. 또한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과 대표성’을 지닌 “포퓰리스트들의 성공을 달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법세력”으로 기성 엘리트들은 그려진다. 포퓰리스트들의 “실패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도, 그것은 불법세력인 엘리트의 공작 때문이라는 논리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을 기득권으로부터 공격받는 피해자로 서사화함으로써 정치윤리 담론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이들은 대중들의 분노와 원한감정을 촉발시키는 ‘피해자의식’(victimhood)을 통해 도덕적·정치적 결집 전략을 펼친다.<sup>25)</sup>

<sup>23)</sup> Mounk, *The People vs. Democracy*, pp. 29-31.

<sup>24)</sup> Rovira Kaltwasser, Cristóbal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정병기 외, 『현대 포퓰리즘: 유럽과 한국』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21).

기성정치를 적대하는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진정한’ 국민이라면 그들을 따를 것이며, 포퓰리스트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국익을 도외시하는 ‘타락한 무리’라는 것이다. ‘진정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포퓰리스트들은 순혈주의적인 단일사회 환상을 조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기성정치 엘리트나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배교자’로 간주하고, 이주민과 타자를 ‘이교도’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선악이원론 세계관을 강화한다.

포퓰리스트들은 종종 카리스마적 정치스타일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성정치가 과도적이고 관료화된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지배계급 블록으로부터 소외된 대중들은 자신들이 대표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포퓰리스트들은 ‘공백’을 파고들어 자신들이 국민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나선다. 이 점에서 포퓰리즘은 “비민주적 자유주의(undemocratic liberalism)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자유적이면서 민주적인”(illiberal democratic)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sup>26)</sup>

25) Hedetoft Ulf, “Nationalism and the Political Theology of Populism” in Höhne, Florian, Meireis, Torsten, eds. *Religion and Neo-Nationalism in Europe*, (Baden-Baden, Germany: Nomos Verlagsgesellschaft, 2020), pp. 101-102.

26)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Studying Popu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and Future Research Agend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51, no. 13 (2018), p. 1670. 논문의 흐름상 여기에서는 포퓰리즘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결부된 부정적 차원 일부에만 주목했다. 이 글에서는 이방인과 타자를 혐오하고 배격하는 극우 종교정치 포퓰리즘을 주로 다루지만,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 일반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역시 마찬가지다. 홍철기, 「포퓰리즘-반포퓰리즘 논쟁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포퓰리즘은 정말로 반-헌정주의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가?」 『시민과 세계』 제34호 (2019), 37-68쪽. 홍철기는 포퓰리스트들이 인민의 권위에 호소하면서,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결집하

본 논문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포퓰리즘 정치가 집합적 의지를 ‘인종화된’ 문명담론과 결합시키고 이주민과 타자를 배격하는 모습이다. 시리아 내전 여파로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극우세력은 반이슬람 정서를 확산시켰다.<sup>27)</sup> ‘서구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의 줄임말인 ‘페기다’(Pegida)는 이 흐름에 속한 집단 가운데 하나이다.<sup>28)</sup> 네덜란드 자유당, 덴마크 인민당 등 ‘정체성 근본주의 정치’(identitarian politics) 포퓰리즘 집단의 경우 유럽에서 반이슬람·반이민 운동을 결집하고 조직화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문명주의’(Christian Civilizationism)라는 종교·문화 정체성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설령 개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라도) 정치적 차원에서 유럽이 기독교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속화된 문화로서의 기독교문명 전통’을 주창한다. 정체성근본주의 운동을 이끄는 이들은 “협소한 일국 단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문명 차원에서” 우리와 그들을 대립시킨다. 이들에 따르면, 오늘의 유럽은 근대 세속화와 문명화를 통과하지 않은 ‘그들’ 이슬람세력의 ‘야만과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 기독교문명주의자들이 ‘야만’을 배격하고 유럽 문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9)</sup>

---

는 “정치양상을 민주주의 정치현실과 민주적 헌정질서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으며,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가 과도하게 자유민주적 선거에 몰두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다른 한편에서 “현대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주된 용법”이 포퓰리즘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흐름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sup>27)</sup> Balkenhol, Markus et al, eds., *The Secular Sacred: Emotions of Belonging and the Perils of Nation and Relig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0).

<sup>28)</sup> Havertz Ralf,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 (New York, NY: Routledge, 2021).



한편 배외적인 포퓰리즘 정치에 나타난 ‘구원’(redemption) 담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 내부에서의 위기’(crisis in represent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0)</sup> 포퓰리스트들은 엘리트와 대중을 연결하는 매체를 경유하기보다, 자신들이 국민 개개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입하곤 한다. 하지만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적 직접성’을 강조하더라도 대표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세계에서 대표 없는 정치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런데 포퓰리즘 정치에서는 대표 민주주의 내부에서 ‘매개된’ 대표를 넘어, 전체 국민의 의지와 ‘직접 닿아 있는’ 대표자와 상호 일체감을 상상한다.<sup>31)</sup>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대표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대표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 흔들림과 관련된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매개 없이 국민의 의지가 완벽한 형태로 체현된’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환상’에 가깝다. 그런데, 라투르의 관찰에 따르면, 현실에 부재한 ‘환상’이 정치세계에서 현존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어떤 재현(再現, re-presentation)도 없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할 수 있고, “어떤 잠정적 주장 없이” 단언할 수 있고, “어떤 불완전한 증거도 없이” 확실할 수 있고, “어떤 불투명한 변환이나 매개, 위배의 지층”도 없는, “집회, 위임, 입증, 논쟁, 협상,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복잡한 장치도 없는” 그런 ‘직접성’의 대표가 요청된다.<sup>32)</sup>

29) Brubaker, Rogers, “Between Ethnic Nationalism and Civilizationism: The European Populist Move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40, no. 8 (2017), pp. 1193.

30) Mazzarella, William, “Populism as Political Theology” *The University of Arizona Sawyer Seminar: Neoliberalism at the Neopopulist Crossroads* (March 4, 2021).

31) 우르비나티는 선거민주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대표의 다양성 및 ‘직접 연결’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 “직접 연결하는 대표민주주의”(direct representative democracy)라는 표현을 제안한다. Urbinati, Nadia, “A Revolt against Intermediary Bodies” *Constellations*, vol. 22 no. 4 (2015), p. 480.

32) Latour, Bruno, “From Realpolitik to Dingpolitik or How to Make Things Public”, in

현대 정치에서 ‘대표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포퓰리즘 정치에서 ‘매개 없이’ 전체와 직접 닿아 있는 사회를 상상하면서 기성 정치권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에는 민주주의의 현실(現實)과 이상(理想)의 간극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캐노번은 민주주의가 ‘실무적인’(pragmatic) 정치와 ‘구원하는’(redemptive) 정치라는 두 얼굴이 있다고 말한다. 실무적 차원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민주적 규범과 제도, 관행을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일상의 실무’ 차원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광휘로 둘러싸여 “주권자 인민의 행동을 통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비전을 가진 “열망의 보고(寶庫)”이다. 가령 “실무적 관점에서 보통선거는 비폭력적으로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이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그것은 민주주의를 갱신하는 의례이다.” ‘구원’을 향한 열망은 사그라지고 ‘실무’ 민주주의만 남은 기성정치는 활력을 잃는다. 공백기에 포퓰리스트들은 “민주주의의 빛나는 이상을 갱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기성 정당의 자리를 대신하려 든다.<sup>33)</sup>

포퓰리즘 정치와 부흥주의 종교는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종교적 카리스마의 광휘가 사라지면 제도화된 종교기관이 신도들의 종교생활을 주로 매개한다. 루틴화된 기성종교가 주도하는 ‘실무적인’ 종교 활동이 형식화되면서 민중들의 불만이 증대될 때, 풀뿌리 차원에서는 카리스마적인 부흥사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기존 종교기관의 매개 없이, ‘신의 목소리’(Vox Dei)를 ‘직접’ 들을 것을 요청한다. 이와 유사하게, ‘구원하는’ 민주주의 비전은 상실한 채, ‘실무형’ 민주주의에

---

Latour, Bruno, Weibel, Peter eds, *Making Things Public: Atmospheres of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2005), p. 26.

<sup>33)</sup> Canovan, Margaret,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47, no. 1 (1999), pp. 10-11.

만 함몰되어 있고, 기성정치권의 실질적인 성과가 좋지 않을 때, 포퓰리즘 정치가 탄력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된다. 이 공백기에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신적 권위에 직접 호소한 부흥사들처럼, 자신이 매개되지 않는 ‘인민의 목소리’(Vox Populi)를 선포한다.<sup>34)</sup>

‘구원하는’ 민주주의 비전이 현실에서 곧바로 체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환상’이라면, 민주주의를 순전히 ‘실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역시 허망하다고 캐노번은 말한다. “실무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의 권력과 정통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구원하는 요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는 포퓰리즘의 공간이 늘 남겨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sup>35)</sup>

문제는 오늘날 포퓰리즘의 정치가 상상하는 ‘구원’ 서사가 뒤틀린 방식의 교조주의적 혐오정치와 결합하면서 이방인과 타자를 배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타자에 대한 왜곡되고 일그러진 사회적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문화적인 문명담론과 결합된 포퓰리즘 극우정치는 벤하비브의 희망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타자의 권리에 대한 담론윤리학과 이방인 포용을 향한 그녀의 요구는 상찬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스트세계화 시대에 민주적 반추를 통한 데모스 정체성의 재구성이 대화적 보편주의로 향하지 않는 냉혹한 정치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는 기성제도권 정치가 공모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부조리한 정치적 지배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민중들의 충족되지

<sup>34)</sup> Canovan,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 14. 다른 관점에서 근래 포퓰리즘 정치의 한 가지 흐름이 기술관료 엘리트주의와 조우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도리어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도 참조하라. Bickerton, Christopher J, Accetti, Carlo Invernizzi, *Technopopulism : The New Logic of Democratic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sup>35)</sup> Canovan,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 16.

못한 요구와 불만을 소수자에게 투사하면서 사안을 왜곡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방인과 낯선 타자는 왜곡된 방식으로 표상되곤 한다. 온라인공간에서 극단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낙인찍고 숙청하는 문화를 숙주삼아 타자를 배제하는 혐오세력이 확산되고 있다.<sup>36)</sup>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프라인 세계에서 강한 정체성을 내세우는 ‘정체성-근본주의’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극단화된 형태로 표출(탈익명화)하는 반면, 온라인 세계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타자를 혐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세계 모두에서 혐오와 조롱으로 실제로 익명화되고 지워지는 존재는 자신이라기보다 타자의 실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에게 타자는 단지 자신들이 표출하는 주장과 열광의 정서를 공유할 때로 제한된다. 타자의 실존은 자기동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되고, 버려질 따름이다.<sup>37)</sup>

온·오프라인 세계에서 부상한 포퓰리즘 정치의 수사 및 동원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비(非)의식적이고, 선(先)언어적인 ‘정서’(정동, affect)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식을 경유하지 않고, 언어로 명료화하는 차원 이전에 신체 감각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넓고 심원한 전체에 직접 접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정치 캠페인을 조직한다. 이방인과 타자를 배격하는 정치운동이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 접속’의 감각을 일깨우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보편적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몽의 기

36) Nagle, Angela, *Kill All Normies: Online Culture Wars from 4chan and Tumblr to Trump and the Alt-Right* (Washington, USA: Zero Books, 2017); 김학준, 『보통 일베들의 시대: ‘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서울: 오월의봄, 2022).

37) 익명성과 관련해서는 탈세속화 시대의 갈등양상을 다룬 간담회에서 이길호가 지적한 관점의 도움을 받았다. 이길호, 「익명의 가장자리에서: 익명-장소와 익명-되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비교문화연구』 제27권 1호 (2021), 239~297쪽.

획으로 응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욕망’(desire)을 재형성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편 정서에 주목한다고 할 때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가 두려움이나 수치심, 공허감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공통정서에만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스바움의 지적처럼, 근대 유럽세계에서 일어난 유대인 혐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정교한 사회공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대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그들이 혐오스러웠거나 본래부터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대인의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인위적 결과”였으며, “그들을 격하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조작과 결합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을 “지배계급에서 떼어놓기 위해” 동물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그들의 신체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유포했다.<sup>38)</sup>

타자를 배격하는 정치세력은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고, 외집단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등급화하면서, ‘구원’과 ‘파문’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응답 역시 인지적 차원을 넘어 욕망을 재형성하고, 배외주의를 전복하는 공동의 사회적 상상을 그려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얼굴에 ‘구원하는 정치’가 있다면, 정서와 합리성(affect and rationality)을 함께 관여시키면서 ‘구원’ 서사를 다시 써야 한다.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무엇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 것이며(어떤 삶과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상상을 모색해야 한다.

<sup>38)</sup> 너스바움, 마사 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2015), 206~207쪽.

#### IV. 환대와 공생을 위한 공동체적 실천 - ‘공동의 사회적 상상’ 모색과 결사체의 역할

이방인을 환대하고, 타자와 공생하는 삶을 모색하는 작업은 함께 마주치는 사회적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축적된 경험에서 출발할 수 있다. 현실 정치세계에서 타자와 대면하면서, 공생하는 문화(ethos)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세계시민주의의 규범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에토스(ἦθος)의 그리스어 어원은 ‘체류하는 장소’와 관련된다. 거처(居處)에 머무르면서,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중시하는 정신, 삶의 양식과 행동준칙을 배우고 익혀 성품으로 내면화할 때, 그 사람의 에토스가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풍습과 윤리적 성품으로서의 에토스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소에 공동체 안에서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현대 도시 공간에 거류하는 이들은 이질적인 정체성과 다양한 삶의 내력을 가진 이들과 조우하게 된다. 도시공간은 자본권력에 따라 분할되고 배치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다양하고 때로는 불화하는 문화가 여전히 역동적으로 공존하면서 숨을 쉬고 있다. 대중교통 출퇴근길, 카페, 공원, 학교, 작업실, 광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호흡을 내쉬기 위해 분투하고, 탐험하면서 도시는 약동한다. 타자와의 공생의 첫 걸음은 만남과 소통에서 출발한다. 우려스럽게도, 우리사회에서 소통과 화해, 환대와 공생을 원천봉쇄하는 ‘빛장공동체’(gated community)가 확산되고 있다. 세넷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뒤섞임 속에서 비공식적인 관계가 깊어질 때 사회적 협력이 번성한다고 말한다.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 자체가 차단되는 ‘빛장공동체’가 확산되고, 자본권력의 지배 아래에서 공식절차에 입각한 ‘거래적 에토스’가 사회를 잠식할 때

사회는 획일적으로 규격화된다. 세넷은 사회적 협력의 조건으로 ‘투과도시’(porous city)를 제안한다. 우연한 기회로 작업장에서 어울리면서, 리듬과 의례를 배우는 등, 강제나 배제 없는 비공식적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통합이나 배제와는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한다.<sup>39)</sup>

트랜스내셔널 이주의 시대에는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 어떤 공동체에도 뿌리내리지 않은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소수이겠지만, 간혹 관광이나 업무 차 국경을 넘나들 수도 있고, 이주민과 난민, 유학생,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질적 공존의 에토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즈마 히로키는 ‘관광객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어둡고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지식의 확장 그 이상의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관광을 하다 보면, 작은 인류학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우연히’ 마주친 만남 속에서 정확한 소통에는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잘못된 배송 과정에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제가 새로운 맥락으로 기입되면서 상호 연대의 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sup>40)</sup>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마주치는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적절하고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39) 김수철, 「공생과 타자: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 이론에 관한 재고찰」 『문화와 정치』 제4권 2호 (2017), 26~33쪽. 세넷의 투과도시 담론과 함께 디지털 도시 공간에서의 커먼스(communs)를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방안 역시 함께 요청받고 있다.

40) 히로키, 아즈마 저, 안천 역, 『관광객의 철학』 (서울: 리시올, 2020), 74~76쪽.

벤하비브 기획을 보충할 수 있는 왈저의 관점을 검토한다. 벤하비브는 왈저를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이 지역적이고 특수한 맥락을 강조하고 인민주권의 의지를 우선한 나머지, 보편인권 주장을 주변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41)</sup> 왈저는 국경을 넘어서는 비시민을 향한 의무보다 동료시민들에 대한 의무가 ‘보다 두텁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동료시민에 대한 ‘보다 두터운’ 도덕적 의무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도주의적 의무(humanitarian duties)를 실천적으로 방기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sup>42)</sup> 뿐만 아니라, 왈저는 이주민들의 권리에 관해 진취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벤하비브가 이주민들이 지역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를 옹호했다면, 왈저는 이주민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취한다. “기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입국하도록 승인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의무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자국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sup>43)</sup>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권은 “상호부조가 아닌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의 문제”라는 점을 왈저는 분명히 한다. 그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역시 조건 없이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국인들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고, 정치적 활동가로서 갖게 되는 권리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동일한 권리가 부여될 것이다.”<sup>44)</sup>

41)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pp. 114-128.

42)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레비토브와 마케도는 ‘주권주의(sovereignism) 안에는 ‘세계시민적 지향을 갖춘 주권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Alex Levitov, Stephen Macedo, “Human Rights, Membership, and Moral Responsibility in an Unjust World: The Case of Immigration Restrictions” Adam Etinson (ed.) *Human Rights: Moral or Politic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469-488.

43) Walzer, Michael,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83), p. 52.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일부 사주들의 범법행위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 점에서 왈저가 제시하는 이주민들의 시민권 변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왈저는 다만 이방인 환대와 타자와의 공생에 있어서 나라와 지역마다 상이하게 진화해 온 역사적·문화적 경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마다 상이한 실천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벤하비브 역시 국경 자체를 허물기보다는 투과성이 있는(porous) 공간을 모색하고 있음을 적시한다. 이는 “일정한 수준에서 국가가 이민자의 흐름을 관리하고 때로는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왈저와 벤하비브의 관점은 동일하다.<sup>45)</sup>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정책을 입안할 때, 공동체의 자결권에 어느 정도로 도덕적 무게를 두는지에 있다. 왈저의 관점에서는 국가마다 이주자 정책이 다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환대와 공생은 ‘관계적’ 가치이며, 구체적으로 규범과 제도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개별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구조와 제도, 담론과 정책, 서사가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가 ‘진영화’(bloc-ization)되고 있는 국제현실에서, ‘보편규범’을 일률적이고 동일한 속도로 강제하는 것은, 선의와는 무관하게, 이면에서 작동되는 권력관계를 은폐할 수도 있다. 왈저는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정치공동체의 자결권을 신중하게 변호한다.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모색하는 과정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함께 요청된다. 먼저, 국가의 역할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국가는 단순히 거대하고 획일적인 조직체라기보다 다양한 법과 제도, 행정적 규제와 관련된 ‘효과’ 혹은 ‘양상블’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 이민에 대

<sup>44)</sup> Walzer,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pp. 59-60.

<sup>45)</sup> Walzer, Michael, “In Response: Support for Modesty and the Nation-State”, *Responsive Community* vol. 11, no. 2 (2001), p. 30.

해서 국가는 이민정책, 제도, 법, 행정적 실천, 입법 과정에서의 논쟁과 그 배경의 지식체계, 증명서, 신분증, 비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독점적 관리 및 운영 등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실천들의 누적된 효과”이다.<sup>46)</sup> 또한 국경을 통제하는 수준 혹은 인구 배치를 관리하는 영역을 넘어, 이를 테면 국내노동시장의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법·제도, 가이드라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국가를 다양하고 이질적인 실천의 효과로 이해할 때, 이미 생성된 법규범의 문제에 주목할 수 있다.

벤하비브는 민주적 반추 과정을 통해 ‘법을 생성하는 정치’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미’ 생성된 법규범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충하는 법, 제도 사이의 공백을 파고들면서, 이방인을 환대하고, 타자와의 공생을 모색할 수 있다. 일례로 유럽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난민법이 도입된 우리 맥락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난민레짐이 20세기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경험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반면, 우리의 경우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피난처’와 같은 난민인권단체들과 법조인들이 주축이 된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의원입법을 통해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널리 알려진 점은 우리사회에 난민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난민인정률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심사절차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난민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법이행과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확충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미’ 제정된 법규범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한계로 지적되는 법

<sup>46)</sup> 박위준, 「이민 연구에서의 국가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021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요약집』 (2021), 74쪽.

안 개정 작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제도적 실천의 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도의 차원에서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이방인과 낯선 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정치제도적인 정책과 함께 문화적 차원에서의 국민정서 역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환대와 공생을 모색하는 사회적 상상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결사체들(associations)의 역할에 주목한다. 합리적 개인성과 보편규범을 우선하는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이야기적 존재인 인간이 좋은 삶을 탐구해 갈 때 전통과 공동체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결사체는 사회적 공간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삶에 관한 집합적 서사를 함께 구축할 뿐 아니라, 지지와 격려 등 정서적 차원을 보충해 준다. 공생과 환대를 둘러싼 논의가 법·제도 차원을 넘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사체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풀뿌리 차원에서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는 건강한 결사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문화전쟁 양상은 상이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순혈사회’를 동경하면서 이방인과 타자를 배격하는 종교정치 포퓰리즘 운동세력이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한편에서는 종교문화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특정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은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론장에서 혐오를 양산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집단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결사체 차원에서 감정구조를 재편하는 문화적 형성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전과 전통을 둘러싼 해석학적 투쟁을 통해서 환대의 정치신학이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환대의 정치신학을 모색하는 작업은 단순히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신념 차원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명료화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생각들이나 감각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감정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방인을 환대하고, 타자와 상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내러티브를 그려내는 문화·예술 작품들도 일조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형성물의 접합을 통해서 환대와 공생의 문화가 우리사회에 구현되도록 힘쓰는 작업이 요청된다. 환대를 사회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은 물질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V. 나가면서

이방인 환대의 문제는 다층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이민자, 난민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타자철학의 문제로 탐구되기도 한다. 그리고 낯선 타자성 담론은 종종 내 안의 낯설음, 타자로서의 자기 담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현실정치에서도 국경에서의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는 국내 시민적 자유와 연계되어 있다. 외부와 내부는 뒤엎힌 채로 공존한다. 이주민을 통제하는 문제는 단순히 국경 관리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의 삶을 관리, 감독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이는 시민적 자유와 통제의 정당성 물음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국경 너머 이방인을 향한 태도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주변화된 타자를 마주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sup>47)</sup>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위한 규범이

---

<sup>47)</sup> Kukathas, Chandran, *Immigration and Freedo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론을 수립한 벤하비브의 작업을 재검토했다. 칸트적 유산을 계승한 벤하비브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도 인민주권 원칙과 보편인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신의 기획을 포기하지 않았다.<sup>48)</sup> 본 논문은 벤하비브 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국민과 난민 경계를 탈구축하고 재구축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모색한 그녀의 근본취지를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벤하비브의 희망과 달리 국민의 이름으로 이방인과 타자를 배격하는 모습이 심해지거나 배외적인 종교정치 포퓰리스트들이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현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포퓰리즘을 단순히 민주주의가 일탈될 때 나타나는 병리현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캐노번 논의를 통해 검토했다. 포퓰리즘은 대중을 동원해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시킬 뿐 아니라, 인민의 행동을 통해 ‘보다 좋은 세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포퓰리즘 운동 가운데 이방인을 일그러진 방식으로 상상하고 타자를 기만적으로 억압하는 형태로 대중들의 정서적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이다.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현실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보편도덕 규범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서적 차원과 공동체의 에토스를 갱신하는 작업으로 논의를 보충했다.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정치제도적 차원의 확충과 더불어

48) 벤하비브는 민주주의 위기론이 팽배해진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자신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Benhabib, Seyla, “The New Sovereignism and Transnational Law: Legal Utopianism, Democratic Scepticism and Statist Realism” *Global Constitutionalism* vol. 5, no. 1 (2016), pp. 109-144; Benhabib, Seyla, “The Slippery Slope of Statist Cosmopolitanism: A Response to Levitov and Macedo”. Adam Etinson (ed.) *Human Rights: Moral or Political?*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489-500.

공동체 윤리규범을 포용적으로 구축하는 사회적 상상을 요청했다. 또한 타자를 환대하는 대중기억(popular memory)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을 담보하는 결사체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였다.

벤하비브의 기획은 비판적으로 숙고할 대상인 동시에 건설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주제이다. 그녀는 이방인 문제와 타자의 권리를 우리 시대에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학술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벤하비브의 작업은 이론가들과 활동가들 모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학계를 넘어 난민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일반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벤하비브는 이방인을 환대하고 타자와 상생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보다 풍부한 이론과 실천을 모색할 것을 자극하고, 보다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도전하고 있다.<sup>49)</sup>

■ 접수: 2022년 11월 1일 / 심사: 2022년 11월 28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

<sup>49)</sup> Brown, Neil, "Book Review: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18, no. 2 (2005), p. 236.

## 【참고문헌】

- 김학준, 『보통 일배들의 시대: ‘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서울: 오월의 봄, 2022.
- 너스바움, 마사 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민음사, 2015.
- 정병기 외, 『현대 포퓰리즘: 유럽과 한국』,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21.
- 히로키, 아즈마 저, 안천 역, 『관광객의 철학』, 서울: 리시울, 2020.
- Alex Levitov, Stephen Macedo, “Human Rights, Membership, and Moral Responsibility in an Unjust World: The Case of Immigration Restrictions” Adam Etinson (ed.) *Human Rights: Moral or Politic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469-488.
- Balkenhol, Markus et al. eds., *The Secular Sacred: Emotions of Belonging and the Perils of Nation and Relig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0.
- Benhabib, Seyla, *Another Cosmopolit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Benhabib, Seyla, *Dignity in Adversity: Human Rights in Troubled Times*,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1.
- Benhabib, Seyla,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Bickerton, Christopher J, Accetti, Carlo Invernizzi, *Technopopulism: The New Logic of Democratic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Habermas, Juergen,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8.
- Haggard, Stephan and Robert Kaufman, *Backsliding: Democratic Regress in the Contemporary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Havertz Ralf,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 New York, NY: Routledge, 2021.
- Ikenberry, John, *A World Safe for Democracy: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the Crises of Global Ord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20.
- Kukathas, Chandran, *Immigration and Freedo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Levitsky, Steven, Ziblatt, Daniel,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2018.

Mearsheimer, John,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8.

Mounk, Yascha, *The People vs. Democracy :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Nagle, Angela, *Kill All Normies: Online Culture Wars from 4chan and Tumblr to  
Trump and the Alt-Right*, Washington, USA: Zero Books, 2017.

Rovira Kaltwasser, Cristóbal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Walzer, Michael,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83.

Zakaria, Fareed,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 2003.

김수철, 「공생과 타자: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 이론에 관한 재고찰」 『문화  
와 정치』 제4권 2호, 2017, 26~33쪽.

박위준, 「이민 연구에서의 국가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021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요약집』, 2021, 74~75쪽.

이길호, 「익명의 가장자리에서: 익명-장소와 익명-되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비교문화연구』 제27집 제1호, 2021, 239~297쪽.

홍철기, 「포퓰리즘-반포퓰리즘 논쟁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포퓰리즘은 정말로  
반-헌정주의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가?」 『시민과 세계』 제34호, 2019,  
37~68쪽.

히오콘다 에레라 저, 이은아 역, 「팬데믹 시기의 이주: 불평등의 새롭고 오래된 형  
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2 라틴아메리카: COVID-19 팬  
데믹과 불평등』, 서울: 동명사, 2022, 63~74쪽.

Benhabib, Seyla, “The New Sovereignism and Transnational Law: Legal Utopianism,  
Democratic Scepticism and Statist Realism” *Global Constitutionalism* vol. 5,  
no. 1 (2016), pp. 109-144.

Benhabib, Seyla., “The Slippery Slope of Statist Cosmopolitanism: A Response to



- Levitov and Macedo,” in Adam Etinson ed., *Human Rights: Moral or Politic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489-500.
- Brown, Neil, “Book Review: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18, no. 2 (2005), pp. 235-236.
- Brubaker, Rogers, “Between Ethnic Nationalism and Civilizationism: The European Populist Move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40, no. 8 (2017), pp. 1191-1226.
- Canovan, Margaret,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47, no. 1 (1999), pp. 2-16.
- Hedetoft Ulf, “Nationalism and the Political Theology of Populism” in Höhne, Florian, Meireis, Torsten, eds. *Religion and Neo-Nationalism in Europe*, Baden-Baden, Germany: Nomos Verlagsgesellschaft, 2020, pp. 99-114.
- Latour, Bruno, “From Realpolitik to Dingpolitik or How to Make Things Public”, in Latour, Bruno, Weibel, Peter eds, *Making Things Public: Atmospheres of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2005, pp. 14-41.
- Levitov, Alex and Stephen Macedo, “Human Rights, Membership, and Moral Responsibility in an Unjust World: The Case of Immigration Restrictions” in Adam Etinson ed., *Human Rights: Moral or Politic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469-488.
- Mazzarella, William, “Populism as Political Theology”, *The University of Arizona Sawyer Seminar: Neoliberalism at the Neopopulist Crossroads* (March 4, 2021).
-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Studying Popu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and Future Research Agend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51, no. 13 (2018), pp. 1667-1693.
- Urbinati, Nadia, “A Revolt against Intermediary Bodies” *Constellations* vol. 22, no. 4 (2015), pp. 477-486.
- Walzer, Michael, “In Response: Support for Modesty and the Nation-State” *Responsive Community* vol. 11, no. 2 (2001), pp. 28-31.

## Communal Practice of Hospitality and Symbiosis in the Age of Transnational Migration: Revisiting Benhabib's Cosmopolitanism

Son, Min-Seok (Chosu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Benhabib's attempt to harmonize cosmopolitan norms and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principles. Next, it examines the situation in which Benhabib's expectations are continuously betrayed. It is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illiberal democracy" and religious-political populism in which the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principles show a closed and exclusive attitude rather than promoting the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collective myth(mythos) for narratives for a co-prosperity of community beyond the universal moral norms and the unilateral approach of human rationality (logos). In this regard, it highlights the need to rebuild the common social imaginaries in forming a society beyond the illusion of homogeneous society in a diversified world. In practice,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reconsidering the role of cultural and religious associations and reconstructing discourse in "co-prosperity" of those who occupy the mainstream culture and the others.

Keywords: cosmopolitanism, Seyla Benhabib, religio-political populism, communal practice, social imaginaries

손민석 (Son, Min-Seok)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정치와 종교 관계, 디지털 전환기 집단신화와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근대 공화주의 담론」, 「레오 스트라우스의 고전적 자연권 탐구」, 「레오 스트라우스의 마키아벨리 해석과 '신학-정치적 문제」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현대 정치의 위기와 비전: 니체에서 현재까지』(공저, 아카넷),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1,2(공저, 도서출판100), 옮긴 책으로는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근대의 신학-정치적 상상과 성찬의 정치학』(비아), 『서양을 번역하다』(공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등이 있다.